KWDI
해외통신

2022년 7월 (2022.7.1~7.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덴마크 Denmark

덴마크, 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법 8월 발효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2년 3월, 덴마크 의회는 기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개정된 법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본격적인 새 개정법 발효를 앞두고 개정된 내용 일부를 개괄하고자 한다. 우선 이제까지 시행된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덴마크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주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부모 각 32주(추가연장 14주 가능)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간 서로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은 출산 전 4주, 출산 후 2주 휴가, 육아휴직 22주가 주어진다. 배우자는 출산 후 2주간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22주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오는 8월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있어 유연성과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주어진 육아휴직 22주 중 9주는 부모 각자에게 지정된 휴가로 양도할 수 없고, 나머지 13주는 부모 양측이 상대방에게 재량껏 양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가능한 13주 중 5주는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 기존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비교하면,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2주(배우자 출산휴가)에서 11주(배우자 출산휴가 2주+양도 불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9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곧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일명 '24/24 모델'로 불리기도 하는데, 부모 양측 동등하게 산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각 24주의 유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 또한, 덴마크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수당 총 수령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부모가 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출산 관련 휴가를 크게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첫째는 휴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absence), 둘째는 출산 후 모성 또는 부성수당을 수령할 권리(the right to receive benefits)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권리와는 별도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당 수령 여부, 금액을 책정 및 지급한다. 출산 전후 휴가를 취할 권리는 모성보호법(Maternity Act)에 의해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받는다.

-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및 수당 자격에 관한 법(Consolidation Act on Entitlement to Leave and Benefits in the Event of Childbirth)에 따라 개인의 근로 유무 여부, 계약 유형, 단체협약,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급여자격과 수령액이 결정된다. 해당 정책은 덴마크 연금지급청(Udbetaling Danmark)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고 상한액은 2022년 주 37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책정할 때 세전 주당 4,465 크로네(한화 약 80만원) 이다.

- 이번 개정된 법은 유럽연합(EU)에서 오는 8월 2일부터 회원국들이 반영해야 하는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해당 지침(Directive 2019/1158)에서는 남녀동등한 자녀 돌봄 분담, 태어난 자녀와의 적절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남성은 최소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한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 병가 급여에 준하는 수당을 받는 유급휴가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 더 코펜하겐 포스트(The Copenhagen Post)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당시 평등부 장관 대리(Acting Minister for Employment and Gender Equality)는 본 개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개별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2021).

- 이번 개정법은 덴마크 고용주 연맹(Confederation of Danish Employers, DA)과 노동조합연맹(Dan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FH)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더 코펜하겐 포스트에 따르면 노동조합연맹 부대표 마이브리트 베를라우(Majbrit Berlau)는 "이 논의는 서로 싸워야 하는 주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된 남성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권리의 문제다. 그리고 부모가 육아휴직 부담을 서로 나누어 짊어져야 여성 근로자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당시, 여러 정당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정당은 부 또는 모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휴직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가족이나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지정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취하기도 했다.

- 덴마크 통계청(Statistics Denmark) 자료를 살펴보면, 자녀 출산 전 및 출산 후 첫 12개월 이내 여성이 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평균 280일, 남성은 35일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의 평균 휴가 사용 일수는 꾸준히 280-282일 수준을 유지했고,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일수는 29.7일에서 35일로 조금씩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나, 덴마크 정부 측에서는 남녀동등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만하다.

참고자료

- EUR-Lex(2022), "Directive (EU) 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2010/18/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9.188.01.0079.01.ENG (접속일: 2022.7.22).
- Horten (2022.3.3) "Bill on earmarked maternity leave has been adopted", https://en.horten.dk/news/2022/march/bill-on-earmarked-maternity-leave-has-been-adopted/ (접속일: 2022.7.22).
- Life in Denmark(덴마크정부 행정정보 통합제공 사이트)(2022) "Maternity/paternity benefits", https://lifeindenmark.borger.dk/family-and-children/ (접속일: 2022.7.22.).
- Statistics Denmark(스웨덴 통계청) (2022), "Parental leave benefits", https://www.dst.dk/en/Statistik/emner/sociale-forhold/offentligt-forsorgede/barselsdagpenge (접속일: 2022.7.22).
- The Copenhagen Post(2021.10.27) "Government delivers new parental leave law", https://cphpost.dk/?p=128932 (접속일: 2022.7.22).
- The Copenhagen Post(2021.9.14) "Denmark close to gender balance for parental leave", https://cphpost.dk/?p=127901 (접속일: 2022.7.22).
- The Local(2022.3.3) "Danish parliament passes new law for 'earmarked' parental leave", https://www.thelocal.dk/20220303/danish-parliament-passes-new-law-for-earmarked-parental-leave/ (접속일: 2022.7.22).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 후 문제 논의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이슈중의 하나는 임신중지 관련 법안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대로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정부 대법원이 미시시피(Mississippi)주의 15주(15 weeks) 이후의 임신중지규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1973년 결정이 뒤집어졌다. 1973년 이후로 로(Roe)판결 결정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거의 임신 중기까지의 임신중지가 허용됐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거의 반세기 동안 여성에서 주어졌던 헌법적 임신중지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임신중지를 법으로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에서 결정하게 되었다(NPR, 2022.6.24).

-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의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 법에 맡기게 됨에 따라 주마다 임신중지법을 어떻게 할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내 반 이상의 주에서는 더욱 강력한 임신중지 규제법이 개정/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의 13개 주에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 중 앨라바마(Alabama), 알칸사(Arkansas), 켄터키(Kentucky), 루지에나(Louisiana) 등 8개의 주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는 즉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실효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임신중지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 중죄로 간주돼 시술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이 성폭력이든 근친상간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법이 적용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CNBC, 2022).

- 이에 반해 많은 북동부 주와 서부해안 주들은 여전히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알래스카(Alaska), 뉴저지(New Jersey), 뉴멕시코(New Mexico) 등 6개 주에서는 임신 28주가 지나지 않은 이상 임신 중 언제나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태아 기형,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등은 임신 후기에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신중지가 필요한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NPR, 2022.7.13).

- 또한 어떤 주의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Michigan) 주의 경우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중지를 중범죄 여기는 90년 된 미시간 주법(State laws)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 이를 기각하기 위한 제안된 헌법 개정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고 추진 중이다. 만약 이 안이 채택된다면 미시간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주의 법이 임신중지, 피임, 불임 치료와 같은 개인의 생식의 자유(reproductive freedom)를 보장하도록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버몬트(Vermont)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미시간의 경우 캘리포니아나 버몬트와 다르게 현재 임신중지 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 곧 임신중지가 금지될 예정이다(NPR, 2022.7.7).

- 연방정부의 임신중지 보장권이 폐지된 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에서 시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오하이오(Ohio)주에서 거주하는 성폭행 피해자인 10살 어린이가 오하이오의 임신중지 금지법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다른 주로 가야 하는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임신중지 보장권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한 예라며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이 법의 여파는 비단 임신중지 시술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임신중지법의 영향으로 임신중절 시술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불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절 약을 구입해 본인 스스로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절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와 지원체계가 있다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중절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과정 중에 과다 출혈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많은 여성들이 의료시설 도움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중절 약을 사용해 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을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신중절 약을 피하기 위해 시술이 불법이지 않은 주로 가서 시술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임신중절약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NPR, 2022.7.11). 하지만 이런 방법은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임신중절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다.

-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하는 주에서의 시험관 아기 시술과 같은 불임치료(Fertility treatments)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험관 시술은 난소에서 최대한 많은 배아를 만들어 건강한 배아는 이식하고 그렇지 않은 배아의 경우 폐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주의 법이 태아(unborn humans)를 임신의 이른 단계인 배아로 정의한다면 시험관 시술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프로세스가 법에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의 1931년 임신중지 금지법에 의하면 (현재는 법정이 임신중지를 금지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이 일시중지된 상태이다) 시험관 시술 병원에서 배아를 폐기하는 행위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NPR, 2022.7.11).

-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고 임신중지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공영라디오 방송/공영방송/마리스트(NPR/PBS Newshour/Marist Poll)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6%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40%만이 찬성한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59%의 여성이, 54%의 남성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찬성 및 반대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88%의 민주당 지지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오직 20%의 공화당 지지자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인 경우 5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47%의 대학 교육 미만의 사람들이, 69%의 대학교육 이상의 응답자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58%) 로 대 웨이드 결정 이후 대법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대답한바 있다 (NPR, 2022.6.27).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만약 임신중절이 주 법에 의해 행해지지 못해질 경우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한 책임도 과연 주(State)에게 있는 것인가이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싱크탱크(think tank) 기관인 브룩킹 인스튜션(the Brookings Institution)의 경제학 선임 연구원 스튜어드 버틀러(Stuart Butler)는 "미국 내에서 어린이 및 임산부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 혹은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가 남부에 위치해있다. 또한 남부에 있는 반 이상의 주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주가 임신중지 금지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가 없으면서 임신중절도 금지하는 주에서 사는 여성 및 어린이들의 경우 이중으로 불행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 여성 및 어린이들이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겠다. 전국적으로 이미 산모 및 어린이들의 기대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저임금 여성 및 유색 인종 여성 임산부 사망률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임신중지 금지법으로 인해 그들의 사망률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NPR, 2022. 7.13).

- 최근 대법원의 임신중지권 보장 폐지는 미국 사회 내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민심과는 반대로 되고 있으며 또한 임신중지 금지로 인해 여성 및 가족, 또 그 사회가 겪게 될 문제는 많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된다. 또한 임신중지 금지로 인해 겪게 될 여러가지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지원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앞세워 임신중지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법을 실행하거나 곧 실행할 계획이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자료

- CNBC(2022.6.24.) "Several U.S. states immediately ban abortion after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https://www.cnbc.com/2022/06/24/us-states-immediately-ban-abortion-following-roe-ruling.html (접속일: 2022.7.13.).
- NPR(2022.6.24.) "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ending right to abortion upheld for decades" https://www.npr.org/2022/06/24/1102305878/supreme-court-abortion-roe-v-wade-decision-overturn (접속일: 2022.7.13.).
- NPR(2022.6.27.) "Poll: Majorities oppose Supreme Court's abortion ruling and worry about other rights" https://www.npr.org/2022/06/27/1107733632/poll-majorities-oppose-supreme-courts-abortion-ruling-and-worry-about-other-right (접속일: 2022.7.13.).
- NPR(2022.7.7.) "Self-induced abortions can raise medical — and legal — questions for doctors" https://www.npr.org/2022/07/07/1110165323/self-induced-abortions-can-raise-medical-and-legal-questions-for-doctors (접속일: 2022.7.14.).
- NPR(2022.7.11.) "Fertility treatments could be in jeopardy in anti-abortion states, IVF patients fear" https://www.npr.org/2022/07/11/1110904525/fertility-treatments-could-be-in-jeopardy-in-anti-abortion-states-ivf-patients-f (접속일: 2022.7.14.).
- NPR(2022.7.13.) "A record-number of abortion related questions are on states' ballots this year" https://www.npr.org/2022/07/13/1111244760/a-record-number-of-abortion-related-questions-are-on-states-ballots-this-year (접속일: 2022.7.13.).
- NPR(2022.7.13.) "Many states have anti-abortion laws. Will they provide a social safety net for moms?" https://www.npr.org/2022/07/13/1111244809/many-states-have-anti-abortion-laws-will-they-provide-a-social-safety-net-for-mo (접속일: 2022.7.14.).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임신중절 관련 정책 동향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2022년 6월 24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폐기되면서, 미국에서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해당 판결 이후 영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특히, 영국의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법무부 장관(Justice Secretary)이 2022년 6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권리장전 개정법안(Bill of Rights Bill)에 임신 중절권이 제외되면서 임신 중절권의 법적 보장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도미니크 랍 장관은 임신중절권은 영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장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임신 중절이 영국에서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영국의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개정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임신중절에 관한 영국의 법률적 근거

  - 영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은 1967년 임신중절법(Abortion Act 1967;이하 임신중절법)에 기반한다. 임신중절법에 따르면, 등록된 전문의에 의해 임신중절이 시행되고, 2명의 전문의가 여성의 상황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면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임신중절법에서 규정한 처벌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임신이 24주 이내이며, 출산이 산모 또는 가족과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되거나; 2)임신중절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3)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4)태아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는 경우이다.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신 24주가 지나도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법적인 처벌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최근 제출된 도미니크 랍 장관의 권리장전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위의 조건들 때문이다. 임신중절은 영국에서 법률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법상 기소 및 처벌에서 면제되는 예외 사항일 뿐이다. 도미니크 랍 장관은 임신중절에 관한 사안은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문제(matter of conscience)이기 때문에 권리장전에 임신중절권이 없어도 미국처럼 임신중절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임신중절이 법률적 권리가 아닌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권리장전에서 삭제한다면 정권에 따라 임신중절에 대한 정책이 여성들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

  -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임신중절은 합법이고,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이하 NHS)에서 모든 비용을 보장한다. NHS 병원이나 면허가 있는 의원에서 무료로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임신중절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직접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한다. 두 번째, 주치의에게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에 연계(referral) 요청을 한다. 세 번째, 성재생 건강의원에서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에 연계(referral) 요청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2주 내로 진행된다.

  - 영국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이 많은 국가들과 다른 점은 상담이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NHS에서는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은 산모 스스로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모가 가족, 동반자, 또는 친구와 상의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산모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NHS는 산모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찾아갈 수 있는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상담 센터도 포함된다.

- 코로나19 시기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

  - 코로나19 시기에 병의원 방문을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의원에 산모가 직접 스스로 연계(self-refer)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으로 초기 의료 임신중절(Early Medical Abortion)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했다. 초기 의료 임신중절약은 임신 10주까지 처방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신중절법에 의거하여, NHS의 절차에 따라 처방되었다.

  - 영국의 임신중절에 관한 의료 접근성이나 의료보장 범위를 보면, 임신중절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것 같다. 하지만, 임신중절법을 살펴보면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가 넓을 뿐이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Justice Secretary)인 도미니크 랍이 제출한 임신중절권이 삭제된 권리장전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영국에서의 임신중절법과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Guttmacher Institute(2022) "Roe v. Wade Overturned: Our Latest Resources" https://www.guttmacher.org/abortion-rights-supreme-court# (접속일: 2022.07.20.).
- The Conversation(2022.6.18.) "UK abortion laws are more precarious than they seem - replacing the Human Rights Act could unsettle them further" https://theconversation.com/uk-abortion-laws-are-more-precarious-than-they-seem-replacing-the-human-rights-act-could-unsettle-them-further-186353 (접속일: 2022.07.20.).
- UK Parliament(업데이트 날짜: 2022.7.21.)"Bill of Rights Bill" https://bills.parliament.uk/bills/3227 (접속일: 2022.07.20.).
- BBC(2022.06.29.) "No strong case for changing abortion rules, says Dominic Raab" https://www.bbc.com/news/uk-politics-61981988 (접속일: 2022.7.20.).
- Legislation.GOV.UK(1967)"Abortion Act 196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section/1 (접속일: 2022.7.22.).
- The Guardian(2022.06.29.) "Dominic Raab says right to abortion does not need to be in bill of right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2/jun/29/dominic-raab-says-right-to-abortion-does-not-need-to-be-in-bill-of-rights (접속일: 2022.7.22.).
- NHS(2020.4.24.)"Abortion" https://www.nhs.uk/conditions/abortion/ (접속일: 2022.7.22.).
-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2022.3.10.) Home use of both pills for early medical abortion up to 10 weeks gestation"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home-use-of-both-pills-for-early-medical-abortion/home-use-of-both-pills-for-early-medical-abortion-up-to-10-weeks-gestation (접속일: 2022.7.23.).

독일 GERMANY

독일,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 폐지와 이에 따른 전망

현지원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육이론 석사과정

- 독일에서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형법 218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가 공인된 상담기관에서 임신중절에 관해 상담을 받고 사흘간의 숙려기간을 거쳤으며 착상 후 12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중절수술이 집도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조건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기도 하다.다만 산부인과 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광고하는 행위는 '형법 219a조'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하 본론에서는 형법219a조의 폐지와 218조의 존속이 갖는 영향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금지 조항 폐지

- 2022년 6월 24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형법 219a조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19년 한 번 개정되어, 의사가 자신의 의료시설에서 수술을 행하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상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의 완전한 폐지는 사민당(SPD), 녹색당(Grünen), 자민당(FDP) 및 좌파당(Die Linke)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 결정은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의사는 임신중절에 관해 단지 면담을 통해 정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상에 중절수술 가능 여부와 그 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고지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여성들이 낙태 시술에 대한 사실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이루어진 219a조에 근거한 모든 형사 법원 판결은 무효화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이 복권되고,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더 나아가 재생산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형법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형법 218조에 대한 비판과 그 폐지논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그러나 임신중절을 여전히 '생명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218조의 존속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임신중절 행위에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출산을 국가적으로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임신중절은 앞서 밝혔듯 공인된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거쳤다는 증명서를 받고 수술 전 사흘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착상 후 12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수술이 집도될 경우에 한해 형이 면제된다. 이에 더해 임신의 지속이 산모 혹은 의사에게 생명의 위협 혹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져다 줄 경우, 그리고 임신이 성폭력 같은 범죄적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졌을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다.

  -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의 회복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형법 218조 또한 폐지되고 임신중절이 비범죄화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 219a조를 폐지하는데 찬성했던 정당들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SPD)과 녹색당(Grünen)은 임신중절이 형법의 영역에 속해서는 안되며 2022년에 개정 혹은 폐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당(FDP)은 형법 218조와 219a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낙태 자체를 합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니온(Union)과 대안당(AfD)의 경우, 219a조의 폐지에 대해서조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큰 유감을 표했다.

- 218조가 여성의 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

  - 218조의 존재는 임신중절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의 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불법인 시술을 행한다는 낙인과 소위'생명지킴이(Lebensschützer[innen])'들의 위협으로 인해 임신중절을 제공하는 의사는 독일 전역의 산부인과 의사 약 19,000명 중 약 1200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중 상당수가 1970년대에 218조 폐지 운동에 연대한 2차 여성권익운동 세대로서, 현재 상당수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산부는 지역에 따라 수술을 위해 의사가 있는 곳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219a조의 폐지는 새 정부의 신호등 연정(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ünen)이 내세운 목표 중 하나였다. 이들이 발표한 연정 협약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의료인의 직업실습과정의 일부로 만드는 것과 임신중절수술로 발생하는 의료적 비용을 기본적인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것 또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18조를 폐지하는 것에 연정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임신중절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것이다. 218조 폐지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어떤 관련된 정책 혹은 입법안이 제시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2022)"Strafgesetzbuch (StGB) § 218 Schwangerschaftsabbruch"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8.html (접속일: 2022.7.19.).
- BMFSFJ(2022.6.24.)"Bundestag beschließt Aufhebung des Werbeverbots für Schwangerschaftsabbrüche"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tag-beschliesst-aufhebung-des-werbeverbots-fuer-schwangerschaftsabbrueche-193830 (접속일: 2022.7.19.)
- BMFSFJ(2018.7.26)"Schwangerschaftsabbruch nach § 218 Strafgesetzbuch"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schwangerschaft-und-kinderwunsch/schwangerschaftsabbruch/schwangerschaftsabbruch-nach-218-strafgesetzbuch-81020 (접속일: 2022.7.19.)
- TAZ(2022.6.24.) "„Ein großartiger Tag"" https://taz.de/Abschaffung-von-Paragraf-219a/!5863365/ (접속일: 2022.7.20.)
- TAZ(2022.01.18.)"… und jetzt weg mit 218!" https://taz.de/Streichung-des-Paragrafen-219a/!5826226/ (접속일: 2022.7.20.)
- TAZ(2022.06.19.) "Treibt Paragraf 218 ab" https://taz.de/Selbstbestimmt-leben/!5859268/ (접속일: 2022.7.20.)